

프랑스의 청년실업 해결 관련 법제

강 흥 진

(해외입법조사위원, SAINT Consulting 대표)

[특집]

2012년도 Global Legal Issue는 최근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생발전'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주제별로 다룰 계획입니다. '공생발전'은 '자본의 책임'과 '상생번영'이 중시되는 시장경제모델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연재순서]

- 고용관계에서의 평등확립을 위한 법제
- 노인복지 관련법제 - 독일, 프랑스, 중국
-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제
 - 일본, 프랑스
-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I. 서론

II. 청년 고용 촉진 정책

1. 사회 활동 편입 계약
2. 2차 기회 학교
3. 실습 계약
4. 청소년 학업 중퇴 방지 정책
5. 직업 탐색 기간
6. 직업 교육 동반 계약
7. 자치 계약
8. 청년 직업 편입 기금
9. 후 원
10. 자율 계약 소득
11. 국방 취업 공공 기관
12. 직업 플랫폼 폼
13. 청년 창업 촉진 계획

III. 결론

I. 서론

2012년 3월 유럽연합의 통계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층 실업은 551만 6천 명에 달해 22.6%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이다.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청년실업률도 22.1%에 달한다.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10%이지만, 프랑스 청년실업률은 21.8%로 유럽연합의 평균적인 청년실업률을 보이지만, 프랑스 전체 실업률의 두세 배에 달한다.

1973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 정부는 38개에 달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했다. 첫 번째 청년실업 해소 정책으로서 1983년 레이몽 바르(Barre) 정부는 부족한 취업 자격을 갖춘 청년에게 취업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역점을 둔 직업 대체 제도를 시행했지만 청년실업 해소에는 기대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1977년 11.4%의 청년실업률은 1984년 25.3%에 달했다.

1984년 사회당 정부는 청년층을 지방 공공 근로에 투입하는 지역공공근로(Travaux d'utilité collective: TUC) 제도를 창설했다. 1986년 필립 세갱(Séguin) 우파 정부는 청년고용을 위한 긴급 계획을 수립해 경제 성장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모색해 1984년 25.3%에 달했던 청년실업률을 1990년 16.5%까지 떨어트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 압박에 직면했던 1990년 좌파 정부의 연대 고용 계약(Contrat emploi solidarité: CES)과 1993년 우파 정부의 직업 편입 계약(Contrat d'insertion professionnelle: CIP)의 실패로 청년실업률의 새로운 상승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1997년 청년실업률은 25.5%에 도달했다. 1997년 마르탱 오브리(Aubry)의 청년고용(Emploi jeunes)계획은 당시 발생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2001년에 청년실업률을 18.1%로 하락시켰다. 이후 재집권한 프랑수와 필롱(Fillon) 우파 정부의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기업 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계약(Soutien à l'emploi des jeunes en entreprise: SEJE), 또는 도미니끄 드 빌팽(Villepin)정부의 1차 고용계약(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정책의 실패는 20%를 넘는 청년실업 사태를 야기했으며, 2011년 말 청년실업률은 24%에 달하게 되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은 주로 교육, 실습 강화, 기업 및 취업 준비 청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과의 취업 준비 계약 등을 통한 취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기업 사회 비용 경감 또는 면제
- 직능 계약(Contrats de qualification), 연대 고용 계약(CES-jeunes), 직업 편입

계약(Contrat d'insertion professionnelle: CIP), 1차 고용 계약(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 등과 같은 특별 고용 계약 제도

- 지역 공공 근로(Travaux d'utilité collective: TUC), 청년고용과 같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고용제 창설
- 산업 연수, 대체 근로 및 인턴 사원과 같은 직업 훈련 지원
-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과 같은 단기 비정규직 근로 촉진
- 구직 알선 정보센터(Permanence d'accueil,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PAIO), 지방 취업센터 및 사회 활동 편입 계약(Contrat d'insertion dans la vie sociale: CIVIS)과 같은 청년실업자 지원

II. 청년고용 촉진 정책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활동 편입 계약(Contrat d'insertion dans la vie sociale: CIVIS)

2005년 1월 1일 사회 편입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법 n° 2005-32, 2006년 4월 21일 기업에서의 취업 생활에 대한 청년 접근에 관한 법 n° 2006-457 및 2005년 3월 14일 청년층의 취업 동반과 사회 활동 편입 계약에 관한 법령 n° 2005-241에 준거하는 사회 활동 편입 계약은 취업 자격에 미달하거나 일반, 기술 또는 직업 바깥로 레아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세부터 25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항구적인 취업, 창업 또는 자영업 재개에 필요한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계약은 지방직업알선센터 또는 구직알선정보센터와 상기 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청년 구직자 간에 체결한다. 계약 체결 후 해당 청년이 직면한 취업 장애, 고용 시장의 환경 및 취업 조건에 맞춘 개별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에서 규정한 취업을 위한 지원 활동에 기인한 취업 결과가 미미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3개월은 고용, 기업 내에서의 실습을 포함하는 직업 교육, 취업 활동 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특별 활동, 구직 또는 창업을 위한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취업 희망 청년이 습득해야 하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전수에 치중한다. 실습 기간의 종료 후 6개월 이상의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해당 청년이 창업에 성공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및 계약

체결시 청년이 26세를 초과한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 당사자인 청년이 계약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담당 지도원의 판단에 근거해 계약은 종료된다.

18세 이상의 계약 체결자는 계약 체결로 인해 무보수 근로, 연수 또는 기타 정부 보조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연간 1,800유로 또는 월 450유로로 제한된 정부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1년 초부터 취업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활동 편입 계약을 강화한 내용의 고용 직접 접근 절차(*Parcours d'accès direct à l'emploi: PADE*)정책이 수립되어 계약 체결 청년은 6개월간 집중적인 사회 활동 편입 계약의 지원을 받는다.

2. 2차 기회 학교(*Écoles de la deuxième chance: E2C*)

2차 기회 학교는 1995년 에디뜨 크레송(*Cresson*)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채택된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백서인 “교육과 배움: 인정하는 사회를 향해 (*Enseigner et apprendre: vers une société cognitive*)”에 바탕을 둔다. 시민 단체에 관한 1901년 7월 1일 법, 2007년 3월 5일 청소년 범죄 예방에 관한 법 n° 2007-297, 교육법 제L.214-14조와 제D.214-9조, 2007년 12월 13일 2차 기회 학교에 관한 법령 n° 2007-1756, 2009년 2월 24일 2차 기회 학교 재정에 실습세 사용 조건에 관한 법령 n° 229-221에 준거하는 2차 기회 학교는 기본적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18세부터 26세 이하의 청년과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마친 후 최소 2년이 지난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청년의 사회 진입 및 취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교육 체제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과는 다른 교육을 제공하는 2차 기회 학교는 지원자에게 취업 동기 부여, 개인 능력 개발, 개인적인 취업 계획 및 자립 정신 함양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2012년 현재 2차 기회 학교는 프랑스의 18개 도와 47개의 군에 약 100여 개의 학교(해외 영토의 4개 학교를 포함)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취학 청년은 12,000명에 달한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직업 교육 및 실습은 협력 기업이 담당한다. 지역에 설립된 각 2차 기회 학교는 협력 단체 및 기업과의 밀접한 협동 관계를 통해 단순한 직업 교육이 아닌 각 지역의 고용 특색을 감안한 현장 교육을 취업 희망 청년층에 제공하며, 졸업 후 취업 시까지 해당 청년에게 취업과 사회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지원한다. 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은 기업은 학생들에게 산업 연수를 통한 기술 교육 및 직장에서의 행동 양식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입학 을 원하는 학생은 연중 어느 때라도 입학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 기업의 연수 기간과 같은 초기 학업 연수 기간을 거친다. 학교는 학생의 특성에 맞춘 다양

한 기간에 이미 설정된 교육 양식이 아닌 현장에 맞춘 융통성 있는 교육으로서 각 학생에게 직업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프랑스어, 수학 및 컴퓨터), 근로자 및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사회 시민 의식, 취업 계획 수립, 협력 기업에서의 체계적인 직업 훈련 및 연수, 교육 수수료중, 교육 과정 및 수수료 후의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 기간 중 학생은 연수생에 대한 법적 보호, 사회 보장 혜택 및 직업 훈련 급여를 받는다. 2차 기회 학교의 교육 기간은 9개월 또는 12개월로 해당 학생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때까지 지속되며, 학생이 교육 중에 취업이 된 경우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 평균 학업 기간은 7개월이며, 수수료 학생의 취업률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해 60%에 달한다.

2차 기회 학교가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2차 기회 학교 네트워크는 고용교육부가 요구하는 등급을 발급받는다. 상기 등급 발급에 필요한 평가를 위해 2차 기회 학교는 외부 평가 위원 및 독립적인 국립 위원회의 검사를 거친다.

지방의회는 학교의 재정과 연수 학생의 보수를 지원한다. 200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유럽사회기금(Fonds social européen: FSE) 및 사회 편입 및 기회 평등을 위한 국립 기구(Agence nationale pour la cohésion sociale et l'égalité des chances: ACSé)와 더불어 국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며, 학교는 또한 산업 연수세로 징수된 재원을 지원받는다.

3. 실습 계약(Contrat d'apprentissage)

실습 계약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 계약으로 학력 또는 경력이 부족한 16세 부터 25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에게 필요한 일반, 이론 및 현장 직업 교육의 제공을 통한 기술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실습 계약은 특수한 형태의 근로 계약으로 계약 기간은 획득해야 하는 자격증의 내용과 실습 근로자의 실습 등급에 따라 1년에서 3년이다. 파트 타임 실습 계약은 금지된다. 실습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고, 매년 인상되며, 최저 임금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최저 실습 임금을 수령한다.

계약 연도	실습 근로자 나이		
	18세 미만	18세 ~ 21세	21세 이상
1년차	25%	41%	53%
2년차	37%	49%	61%
3년차	53%	65%	78%

실습 계약의 연장 시, 실습 근로자는 실습 계약 연장 전해에 적용되었던 법정 최저 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수령한다.

실습 근로자는 실습생 양성 센터에서 일반, 이론 및 실기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고,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민간 또는 공공 기업에서 실습한다. 실습 근로자에 대한 실습 교육은 전문 근로자가 담당한다. 노동법 제L.6222-1조와 제L.6222-2조에 준거해 두 개의 기업이 동시에 실습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상기 계약을 체결한 실습 근로자는 두 개의 직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2012년 2월 8일 노동법 제L.6222-5조와 제L.6325-4조 적용을 위한 교육적 개정에 관한 법령 n° 2012-197). 실습 근로자는 취업 기업과 상이한 다수의 기업에서 실습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습 계약은 실습 근로자의 취업 기업과 실습 기업 간의 실습 비용, 실습 근로자의 실습 급여, 근로 혜택, 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한 분담액과 분담 방식을 규정한다(2012년 5월 2일 다수 기업 실습 근로자 대우에 관한 법령 n° 2012-627). 또한 2012년 4월 11일 한시적 근로 기업에서의 실습 근로자에 관한 법령 n° 2012-472는 한시적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실습 제공 의무도 규정한다.

실습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실습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 보장 납부금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으며, 고용인이 250인 이상의 기업은 재정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사이 2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26세 미만의 실습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의 모든 직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12개월치 사회 보장 납부금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연간 최저 1,000유로의 보상금, 실습 근로자 1인당 1,600 ~ 2,200유로의 기업세 감면 및 장애 근로자 채용시 재정지원 등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는다.

실습 계약으로 인해 기업은 재정지원과 더불어 근로 의욕이 넘치는 청년 근로자를 확보하고, 실습 전문 직원의 실습 교육을 통해 신입 근로자에게 전문 지식과 기술을 더욱 용이하게 전수할 수 있다. 청년 실습 근로자의 경우 전문 자격증 취득 및 실습 급여를 받으며, 취업에 필요한 다수의 자격증 획득에 필요한 다수의 실습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습 급여에 대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 납부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25세를 초과한 성인(기본 자격증보다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실습 근로자, 장애 근로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창업 또는 기업 인수자)과 16세 미만의 고등학교 1년 과정을 이수한 청소년(교육법 제L.337-3-1조)에게도 실습 계약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공예, 상공업, 농업, 공기업, 시민 단체 및 자영업 기업이 포함된 모든 민간 기업은 실습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실습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실습에 필요한 장비, 기술, 근로 조건, 위생 및 안전, 실습 전문 근로자의 교육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노동법 제L.6221-1조 ~ 제L.6225-8조, 제D.6222-1

조 ~ 제R.6226-10 조).

4. 청소년 학업 중퇴 방지 정책(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

유럽연합 차원에서 청소년의 학업 중퇴 방지는 양질의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프랑스의 청소년 학업 중퇴 방지 정책은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각 청소년이 직업에 대한 미래를 건설하고 사회 생활에서의 성공을 이룩하도록 하며, 취업에 필요한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청년층이 부족한 학력으로 인해 고용 시장에서 받는 차별 대우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교육법은 재학 중 각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시스템 운영을 통한 학업 중퇴 학생의 방지를 규정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체결된 실습 계약을 이용해 학업 부적응 학생에게 취업 목표와 적합한 수단을 제공한다(교육법 제L.313-7조와 제L.313-8조). 16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학업 중퇴를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직업 실습 교육을 통한 고용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 기관 및 직업 훈련 단체는 가족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교육 성공을 위한 개인 프로그램(Programme personnalisé de réussite éducative: PPRE)을 통한 개인 학업 및 숙제를 지원받으며, 직업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직업 바깥로레아를 대비한 개인 수업 지원을 제공하며, 학업을 등한시하는 학생에게 교내 규칙 위반에 대한 준법 의식을 주지시킴으로써 학업 의욕을 고취시킨다. 또한 근로 실습 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고용 시장에서 요구하는 취업 자격 조건을 취득하게 한다. 근로 실습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 지방 단위로 조직된 특정 학교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며, 문제 학생의 경우에는 재취학 학교를 통한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어려운 학업 환경에 처한 학생에게는 기숙사 생활을 제공해 학업 성공을 지원한다. 모든 학생에게는 교육 기간 내내 장래 취업 및 전문 직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의 빈곤층 지역의 청소년 학업 중퇴 방지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08년부터 시외 빈곤층 지역의 200개의 일반,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를 지정해 “시의 지역 희망(Espoir Banlieues)” 정책을 시행한다. 상기 고등학교는 학업 및 사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기 및 방학 기간에 주당 두 시간에 달하는 개인 학업 지원을 제공한다. 개인 지도 선생은 학생의 학업 진도 상황을 감독한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회(Nouvelle chance)” 정책을 시행해 학업 중퇴를 예방하고 이를 위한 지원 및 대안을 제시한다.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을 위한 경험 기금(Fonds d'Expérimentation pour la Jeunesse: FEJ)의 지원을 통해 지방 단위로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을 발견해 조직적이며 신속한 관리를 시행한다. 2009년 창설된 기금은 25세 이하의 청년의 사회 참여와 취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40명의 전문 위원이 선정한 평균 3년 기간의 다양한 545개 이상의 청년 취업 계획을 지원하며, 462,000명 이상의 청년이 상기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취업 계획은 청소년 근로자의 실습 계약 촉진, 문화 활동, 학업 장려, 취업, 주거 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해외 취업, 취업 지도, 운전 면허 취득 지원, 건강, 청소년 교육 및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09년 11월 24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와 직업 교육에 관한 법 n° 2009-1437에 준거해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청년을 위한 행동(Agir pour la jeunesse)” 정책은 학업 중퇴자를 위한 교육, 직업 훈련 및 청소년의 사회 생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정책은 취업 장애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취업 동반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2011년에 시행된 상기 정책은 학업 중퇴 청소년에 관한 정보 교환과 전국적인 규모의 항구적인 협력 기반 구축의 용이화에 중점을 두었다. 공립 교육 기관, 농업 관련 단체, 국방 기관, 실습 근로자 교육 기관이 상기 정책에 참여해 학업을 중퇴한 청소년을 지원한다.

5. 직업 탐색 기간(Période en milieu professionnel: PMP)

직업 탐색 기간은 사회 활동 편입 계약(CIVIS)의 일환으로 상기 계약을 체결한 청년 근로자가 취업한 기업 내에서 다양한 직종을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업, 청년 근로자 및 지방취업센터 간의 3자 계약의 형태로 이행된다. 바칼로레아 획득 후 2년 간의 학력을 취득했거나, 무학력 또는 장기 청년실업자인 16세부터 25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업 탐색 기간 계약의 목적은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근로 환경에 대한 경험 및 지식 습득,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경험 획득, 개인의 직업 능력 평가 및 청년 취업자가 취업 희망 기업에 개인의 취업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 탐색 기간을 통해 청년 근로자는 직업에 대한 근무 태도, 직업 숙달 능력 및 기업 내에서의 근로자로서의 인간 관계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2005년 1월 18일 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법 n° 2005-32에 준거한 상기 탐색 기간은 최대 15일로 다양한 직업 현장에서 시행되며, 동일 기업에서 복수의 직

종을 발견하기 위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직종 탐색은 이미 시행 중인 실습과 중복되지 않으며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다. 탐색 기간 동안 해당 청년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않지만, 식권 및 기타 근로 혜택을 받는다. 탐색 기간의 시작과 종료는 담당 직원과 해당 청년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담당자는 해당 청년 근로자가 직종 탐색을 위해 근무를 경험하는 작업장의 책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직종 경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체결된 계약에 부합하는 직종 경험을 해당 청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직업 경험 탐색 기간 동안 해당 청년 근로자는 기업 내규를 준수해야 한다. 사회 활동 편입 계약을 체결한 청년 근로자는 직업 탐색 기간 개시부터 일반 사회 복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직업 탐색을 위해 청년 근로자를 배치받은 작업장은 장비 및 인사 손해에 대비한 특별 보험에 가입한다. 해당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또한 기업 내의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민사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 직업 교육 동반 계약(Contrat d'accompagnement formation: CAF)

직업 교육 동반 계약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용 축소 및 취업 기준 강화에 직면한 청년 취업자가 고용 시장이 요구하는 취업 자격 및 작업 능력에 적합한 상위 직업 자격증 획득 또는 기본 직업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 신속한 장기 취업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 교육 동반 계약은 청년 취업 준비생과 국립 직업알선센터(Pôle emploi)간에 체결된다. 2009년 6월 12일 직업 교육 동반 계약 시행에 관한 내규 DGEFP 2009-24에 준거한 직업 교육 동반 계약은 취업 자격이 없거나 바칼로레아 이후 3년 간의 학업을 마치고 직업알선센터에 등록된 16세부터 25세 사이의 50,0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취업 준비생의 직업 교육 기간 동안 적용된다. 직업 교육 동반 계약은 취업 자격 교육, 기업 내에서의 최초 실습에 필요한 최상의 취업 자격 조건 획득 및 고용 시장의 현실에 적합치 않은 기초 직업 교육으로 인해 장기적인 취업이 어려운 취업 준비 청년에게 강화된 교육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지방 직업 교육 기관의 기능에 따라 직업 교육 동반 계약은 물자 수송, 생산, 농업, 통신, 자원 처리, 공공 건설, 매매 및 관리, 국제 무역의 교역 및 관리, 정보 통신, 개인 서비스, 호텔 및 식당 서비스, 공공 단체 서비스, 응용 예술 및 일반 직업 교육(문학, 언어, 인문학, 경제학, 법학 및 과학)의 15개 분야에서 시행된다.

직업 교육 동반 기간은 직업 교육 기관에서의 학업, 기업에서의 실습 및 취업 동반 지도(구직 기술 교육, 기업과의 연결 등) 기간이 혼합되어 진행된다. 직업 교육 동반 계약을 체결한 청년 취업 준비생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직업 교육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수령한다. 직업 교육의 종료 후에도 국립 직업알선센터가 위임한 전문위원이 3개월에서 6개월간 해당 청년의 취업 상황을 점검한다. 각 지방의 도지사가 청년 취업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상기 위원회는 각 지방의 청년 직업 교육의 운영을 감독하고 관련 협력 단체와의 최상의 협력 관계를 도모한다.

7. 자치 계약(Contrat d'autonomie)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자치 계약은 “시외 지역 희망(Espoir Banlieues)” 정책의 일환으로서 강화된 형태의 취업 동반 계약이다. 도시 개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빈민 지역의 청년 취업 희망자가 공공 또는 민간 취업 지원담당자와의 상기 계약 체결을 통한 적합한 직업 교육을 받은 후 항구적인 취업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7월부터 2012년까지 35개의 지방 군의 빈민 지역의 450,000 명의 청년이 자치 계약을 체결했다. 자치 계약은 항구적인 취업(정규직, 비정규직, 6개월 이상의 한시적 고용, 실습 계약 등), 창업이나 취업을 원하지만 필요한 학력 및 직업 교육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년을 위한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노동법 제 L.5323-1조).

2008년 4월 24일 자치 계약 시행에 관한 도시 정책 담당 차관 내규(시외 지역 네트워크 정책)에 준거해, 계약 체결 청년은 최대 6개월간 구직, 창업 또는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집중적인 개인별 맞춤 지원을 받으며, 고용·직업 교육 및 창업 후의 고용 안정을 위해 취업 후 6개월간 지속적인 지도를 받으며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을 이행할 담당하는 지도자가 관리하는 청년은 1인당 30명에서 40명으로 제한한다. 계약을 체결한 청년은 최대 6개월간 300유로의 지원금과 취업 결과에 따른 지원금(계약 체결시 총액의 35%, 고용 계약 작성 시 45% 및 취업 6개월 후에 20%를 수령)을 지급받으며, 취업 후 발생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취업 후 6개월 동안 해당 지도자의 관찰과 지도를 받는다. 자치 계약을 체결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기업 문화의 적용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갖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점을 누리며, 고용 절차와 해당 청년의 기업 적응에 대해 6개월간 관련 기관의 관찰 지도를 받는다.

8. 청년 직업 편입 기금(Fonds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jeunes: FIPJ)

2004년 12월 30일 2005년 재정에 관한 법 n° 2004-1484와 2005년 3월 19일 청년 취업 및 사회 편입에 관한 내규 DGEFP n° 2005-09에 준거해 창설된 청년 직업 편입 기금은 사회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사회 활동, 가족, 문화 및 인간 관계 등)에 직면한 청년에게 제공하는 개별적인 지원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노동, 고용 및 직업교육지방국에 분배된다. 상기 재정지원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지원 분야, 미성년 청소년과 사회 소외 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우선 정책, 청년층이 겪는 항구적인 취업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어려움 해소에 시행된다. 기금은 상기 활동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과 간접 재정지원으로서 지방직업알선센터 또는 지방직업정보센터를 통한 미성년 청소년에 대한 재정 또는 보조금 지원, 사회 활동 편입 계약 체결 청년을 위한 주거 보조금 지불, 사회 활동 편입 계약체결 청년이 받는 지원에 대한 보충적 보조금 지불, 사회 소외계층 청년을 위한 기존의 지원 기금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 청년층지원 시민단체의 지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청년층의 교육 및 직업 훈련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전국 또는 지방 차원의 청년층 취업촉진 활동 지원을 이행한다. 기금의 협력 기관은 도지사, 지방의회, 노동, 고용 및 직업교육지방국, 지방직업알선센터와 지방직업정보센터, 사회활동단체이다.

9. 후원(Parrainage)

2005년 1월 18일 사회 연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법 n° 2005-32와 차별 억제에 관한 법 n° 2001-1066에 준거한 후원 제도는 사회적 환경, 인종적 특징, 거주 장소, 빈약한 학력, 인맥 결여로 인한 취업 기회 박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과 고용 유지 기회를 부여하는 후원자 역할을 이행하는 자원 봉사자와의 동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원 자원 봉사자는 본인의 직종 인맥과 직업 경험을 활용해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인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후원 제도의 대상은 취업 어려움을 겪는 26세 미만의 청년, 취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력 소지자, 장애 근로자, 기초 생활 보조금 수급자 및 장기 실업자, 미취업 고령자이다.

후원 제도는 지방 단위로 개별적 서면 신청, 대상인의 구두 소개, 합동 소개 및 공동 근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후원자와 대상인의 선정 후 양 당사자는 후원을 위한 만남의 빈도와 방식, 후원자와 대상인 간의 협약 내용 및 후원 기간을

결정한다. 후원 활동은 취업 기술 전수, 면접 태도 교육, 인맥을 통한 취업 기회 탐색 등의 동반 지원과 취업 후 관찰 지도 유지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청년 취업자의 경우 취업 후 1개월간 후원자가 기업 문화 및 근로 조건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과 청년 근로자 간의 분쟁 시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 고용 및 직업교육지방국과 지방의회가 위원장인 지방후원위원회 또는 청년, 스포츠 및 사회 연대 지방국이 후원제도를 관리한다. 지방후원위원회는 후원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다. 지방후원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노동, 고용 및 건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연대 및 기회 평등을 위한 국립 기구가 주로 담당하며, 민간 분야(기업 및 재단 등)로부터의 재정지원 또한 가능하다. 지원금은 후원 제도 설립과 이행에 사용되며, 지방 단위의 후원 제도 시행과 정보 및 홍보에 사용된다. 후원 기구와 재정 담당 기관은 후원 활동 양식, 재정지원 방식 및 후원 이행 일정과 평가 방식에 관한 연례 계약을 체결한다. 국가는 후원 자원 봉사자에게 최대 월 305유로의 보조금을 지불한다.

후원 제도의 대상인은 개인 능력에 대한 평가, 직종 간 인맥에 대한 접근, 기업법 및 기업 내규에 대한 지식 습득, 취업 후 1개월 동안 후원자의 동반 지원 혜택을 받으며, 후원 제도를 통한 고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전문 직업인인 후원자가 지원하는 양질의 근로자 고용 및 안정된 취업 정책 유지의 이점을 갖는다.

후원 제도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기 6개월은 취업을 위해 후기 3개월은 취업 후 적응에 후원을 제공한다. 2011년 후원 제도의 혜택을 받은 22,000명의 취업 희망자 중 63%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그 중 절반이 바칼로레아 이후 2년 간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10. 자율 계약 소득(Revenu contractualisé d'autonomie)

2011년 1월 31일 자율 계약 소득의 시험적 시행에 관한 법령 n° 2011-128에 준거한 자율 계약 소득 제도가 특정 지역의 88개 지방취업센터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상기 소득 제도는 능동적 연대 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의 보충 제도로서 최대 5,50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시행한다. 상기 소득의 목적은 청년층의 취업에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청년층에 소득 보조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상기 소득 보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 청년은 사회 활동 편입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대상 청년층은 일반, 기술 및 직업 바칼로레아를 획득한 18세부터 22세 사이의 청년으로 지난 18개월 중 12개월 전에 국립직업알선센터(Pôle Emploi)에 취업 신청

을 했거나(1그룹), 2년제 대학 교육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6개월 이상 국립 직업 알선센터에 취업 신청을 한 18세부터 23세 사이의 청년(2그룹)이다. 상기 대상자는 직업 교육 계약 또는 취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가는 대상 청년의 월 소득과 계약 기간에 따라 소득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1그룹의 청년 취업 신청자는 2년 기간의 자율 소득 계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해에는 월 최대 250유로, 두 번째 해의 제1/4분기에는 월 240유로, 이후 분기에 따라 각각 월 180유로, 120유로 및 60유로를 지급받는다. 2그룹의 청년 취업 신청자는 1년 기간의 자율 소득 계약을 체결하며, 월 최대 250유로를 상기 기간 동안 지원받는다. 반면 계약 기간에 경제 활동(근로 소득, 실업 수당, 직업 훈련 및 실습 수당)을 통한 해당 청년의 소득이 최저 소득을 초과하거나 사회 연대 소득의 지원을 받을 경우 상기 소득 보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다. 가족이 청년 수당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부모의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가족의 청년 수당은 상기 소득 지원과 통합된다.

계약체결 청년의 의무 위반, 상기 제도 시행 지역 외로의 이사나 주거지 변경, 해당 청년의 의사 표시 및 청년 능동 연대 소득 지원 대상일 경우 상기 소득 지원 계약은 해지된다.

11. 국방 취업 공공 기관(EPIDe)

2005년 8월 2일 청년 사회 활동 및 직업 편입 지원을 위한 국방 기관 설립에 관한 명령에 준거해 설립된 국방취업공공기관은 국방, 고용 및 도시부 산하 기관으로 무학력 및 취업 자격 부재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세부터 25세 사이의 대도시 거주 청년층의 취업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상기 기관의 지원 혜택을 원하는 청년은 모병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대상 청년은 상기 기관이 운영하는 “제2의 기회로서의 국방”이라 명명된 20개의 훈련 센터에서 교육 및 지원을 받는다. 상기 훈련 센터는 취업 자격이 없고, 학습 장애를 겪고 있지만 모병 결격 사유가 없으며 의료적 흠결이 없는 남녀 청년의 지원을 받는다. 프랑스에서의 고용에 문제가 없는 외국 국적의 청년 또한 프랑스 국적의 청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교육 기간 중 제복을 착용하며 행동 교육 및 일반적인 직업 교육을 받는다.

상기 계약은 노동법이 아닌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으로 지원자의 훈련센터 입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원자는 계약 서명 후 7일 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지원자는 월 21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수당과 보너스 총액은 월 300

유료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자는 사회 복지 혜택을 받으며 계약 서명 이전에 국방 취업 공공 기관이 지정한 의사로부터 의료 검사를 받아 훈련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확인받는다.

교육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지원자는 산재에 관한 노동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실업 수당 및 노인 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초기 8개월 동안 읽기, 쓰기 및 수학 교육을 받으며 교육 이수 후 일반 학력증을 부여받는다. 훈련 센터에서 지원자의 체재 기간은 평균 10개월로, 지원자는 교육 수료 후 취업이 가능한 직업 교육을 받으며 국방 취업 공공 기관과 협력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에서 실습을 받는다. 상위 학력을 원하는 지원자는 2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8개월 기간의 지원 계약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2년차 계약을 포함한 총 계약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 기간에는 기업 또는 행정 부처에서의 실습 기간이 포함된다.

지원자의 중대한 실수, 근로 계약 만기, 공직에의 취업, 모병 지원 계약 체결을 사유로 상기 계약은 만료된다.

12. 직업 플랫트 폼(Plates-formes de vocation: PFV)

2005년에 창설되어 시행되어 온 직업 플랫트 폼은 사회 활동 편입 계약 제도를 보충하기 위해 국립 직업알선센터가 시뮬레이션에 의한 모집 방법(Méthode de Recrutement par Simulation: MRS)을 통해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취업 신청 청년의 취업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뮬레이션 모집 방법은 대상자의 직업 경력과 학력을 제외한 근로 실현에 필요한 숙달도에 기초한 데이터를 사용해 대상자의 근로 적합도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창구 직원의 직업 평가를 위해 논리와 주어진 시간 내의 기억력 평가를 통해 증가하는 업무 속도에 대한 스트레스 저항도를 측정한다. 플랫트 폼의 책임자는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뮬레이션과 근로 활동, 행동 양식, 근로 관계 등에 대한 모의 평가 방식을 작성한다. 평가 대상자의 직업 경력이나 학력을 제외한 상기 평가 방식은 저학력이나 직업 경력이 적은 대상에게 유용하며, 고용 차별 억제에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상기 평가가 완료된 청년은 취업을 위한 기업과의 접촉이 허용된다.

상기 평가 방법이 적용되는 직업군은 운송, 건설, 산업, 고객 서비스, 식당 및 대규모 유통 센터와 같은 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분야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평가를 통해 해당 직업 분야의 취업에 필요한 본인의 근무 숙련도를 인지하게 된다. 직업 플랫트 폼은 평가 결과를 해당 청년과 지방 직업 소개 센터에 통보한다. 공

정적인 평가 결과를 획득한 모든 청년 취업 희망자는 취업을 위해 다수의 기업과의 접촉을 주선받는다.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받은 청년에 대해 지방 직업 소개 센터는 해당 청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동반 지원을 재개한다.

2010년에 출간된 2009년도 직업 플랫폼 품이 시행한 시뮬레이션 모집 방법에 대한 평가서에 의하면 137,000건의 평가가 시행되어 55%의 평가 대상자(이 중 40%가 사회 활동 편입 계약을 체결한 청년층)가 긍정적 평가 결과를 받았으며, 긍정적 평가 결과를 받은 대상자의 52%인 39,100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청년 창업 촉진 계획(Projet initiatives jeunes création d'entreprise: PIJ)

2001년부터 시행된 청년 창업 촉진 계획은 창업 또는 기업 인수를 원하는 프랑스 해외 영토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0세 사이의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계획은 노동법 제R.5222-57조와 마이요트에 적용되는 노동법 제R.324-1 조 및 2005년 12월 19일 내규 DGEFP/DAESC n° 2005/169 에 준거한다.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귀이안느, 레위니옹, 마이요트의 프랑스 해외 영토에 거주하며 창업 및 기업 인수를 원하는 18세부터 30세 사이의 청년 및 청년고용 계약 종료 후 3개월 미만인 청년에게 상기 촉진 계획이 적용된다.

창업 또는 기업 인수를 이행한 청년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책임, 즉 제3자에 대한 기업 경영 책임을 보장해야 하며 기업을 대표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실질적 감독에서 자본에 대한 감독은 배제된다. 창업 및 기업 인수에 공동 참여하는 다수의 개인이 단일 창업 또는 기업 인수에 대한 재정지원을 각각 수령할 수 있으며, 최대 7,320유로의 재정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기 지원금은 실질적인 창업 또는 기업 인수일부부터 지급되며, 지원금에 대한 세금 및 사회 복지 납부금이 면제된다. 지원금의 15%는 청년 취업을 위한 자문 및 동반 지원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원하는 청년 창업자는 창업 또는 기업 인수 전에 지방 기업,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국(Direction régionale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 DERECCTE)에 신청한다. 지원금 신청자는 창업 및 기업 인수 계획의 실현성을 평가하는 서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 및 기업 인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지원금의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수령자는 창업 또는 기업 인수를 완수해야 한다. 창업 또는 기업 인수가 초기 계획과 상이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기업이 파산 또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및 해당 기업의 실질적 경영이 중단된 경우 상기 지원금은 취소된다. 지원

금은 창업 지원금과 중복 지불될 수 있다. 반면 상기 지원금 수령자가 고용 촉진 계약 및 실습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다.

III. 결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 촉진 정책은 좌·우 정부를 막론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청년고용 결과의 달성을 이루지 못했으며 일반 실업률보다 두세 배 높은 청년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 상기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청년실업이 발생하지 않은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대두된다.

- 고용 시장의 청년층을 동일한 그룹으로 인식: 구직 청년의 나이에 따른 자격 등급 구분이 필요하다. 취직에 필요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년층, 고용 시장에서 최초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 및 장기 실업 청년층이 가장 취업에 불리한 그룹이며 해당 청년 그룹의 실업률도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경향(40% ~ 50%)을 보여준다. 직업 편입 계약이나 1차 고용 계약 제도가 실패의 원인이다.
- 다양한 청년고용 촉진 정책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인식 약화: 장기간에 걸친 청년고용 촉진 정책의 반복적인 시행으로 프랑스 기업이 타성화에 젖어 청년고용보다는 정부 지원금을 우선시 하는 기업 태도가 문제되고 있다.
- 청년고용이나 청년 직업 훈련을 등한시하는 기업 문화: 구인 기업의 직업 경력 요구로 인해 청년층의 구직 욕구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실업자 간의 구직 경쟁에서 자격을 갖춘 청년 구직자의 경쟁 능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 기업의 변칙적인 고용 정책의 희생자: 경제 불황에 직면한 기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 고용보다는 신입 사원의 자격 검증을 위한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 채용을 선호하게 되었고, 취업 자격이 부족한 청년층은 취업 압박으로 인해 채용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운 임시직 취업에 급급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를 추구한다.

-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및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년을 포함한 청년고용 의무를 기업에 부과
- 대체 업무, 도제, 산업 연수 및 산학 연계 촉진
- 저학력 청년층을 위한 근로 학업제도 개발 및 취업 자격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

한 직업 교육 활성화

- 기성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고용 촉진 정책과 동일한 고용 촉진 정책 적용

한편 2012년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에 선출된 사회당의 프랑수와 올랑드(Hollande)는 청년층의 실업 해소와 고용 확대를 위해 기존 정책 이외에 세대간 고용 협력 계약(청년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 간의 후원 계약을 통한 직업 안정성 도모, 후원 계약 체결한 청년 근로자의 근무 숙달과 숙련 근로자의 정년 퇴직 보장), 150,000명의 청년고용 창출, 빈곤층, 무학력 및 실업 청년에 대한 기업의 고용 의무 부과, 사회 단체 및 기업과의 고용 협력 강화, 국립 직업알선센터의 역할 강화, 대량 해고 노동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업의 경영 이익 또는 주식 배당 촉구 등의 청년층 실업 해소와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미 교육, 직업 훈련, 실습 및 기업 및 청년 취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해 온 프랑스의 청년실업 해결 정책은 올랑드 대통령이 약속한 새로운 내용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의 추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